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운영희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215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운영희,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성준, 김영철,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박 석, 송도호,
유만희, 유정인, 이경숙,
이상욱, 장태용, 최윤희,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24명)

1. 주문

-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최근 FC서울의 린가드, BTS 슈가 등 유명인들이 각각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음.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 또는 그 이상의 면허증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무면허자의 이용이 자유롭고, 위법 운전 단속이 미미하여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PM 교통사고는 2019년 총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5.3배 늘었으며, 사망·부상을 포함한 사상자 수도 481명에서 2,646명으로 5.5배 증가함. PM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3년 기준 음주운전 1,529건 무면허 운전 4,375건이 적발되었음.
- PM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 되고 있으며 앞서 파리, 마드리드, 몬트리올, 멜버른 등 해외 도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퇴출을 결정하였음.

- 2021년 5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현재까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면허 인증 소홀로 청소년이나 무면허자의 운전이 자유로운 상황임.
- 이에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의 신속한 제정과 PM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를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4.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개별 법률제정」 및 「PM 대여사업 자 면허 확인 관리 및 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나고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FC서울의 링가드, BTS 슈가가 각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해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명인사뿐만 아닌 많은 국민들이 전동킥보드 주행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이 강화된 개선책이 마련된 바 있으나, 대여 업체의 허술한 관리와 실효성 없는 단속 체계로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17년 117건 대비 약 20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5년간 사망자 수는 87명, 부상자 수는 8,665명에 달합니다. 또한,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 건수가 14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문제 되고 있으며 앞서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멜버른, 스페인의 마드리드 등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승차 정원 위반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개별 법률 제정과 함께 대여 업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자는 물론 보행자의 사고 방지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국토교통부, 경찰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최소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개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십시오.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